Deloitte Insights

Aug 2025

딜로이트가 제안하는 미래 도시개발 모델

지방 인구 소멸 이슈의 대안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01.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인구 유출과 지역 생산성 하락의 악순환 ····· 04

1.1. 인구의 유출 ····· 05
1.2. 지역 경제의 쇠퇴 및 사회적 비용 발생 ····· 05

02.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 ····· 07

2.1. 일자리 기반 약화 ····· 07
2.2. 수도권 대비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 악화 ····· 09

03. 글로벌 사례로 본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 ····· 10

3.1. 산업 기반 전환 및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사례 ····· 11
3.2.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의 결합 사례 ····· 12
3.3. 원격근무자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사례 ····· 12
3.4. 의료시스템 확충 이후의 정주여건 개선 사례 ····· 13
3.5. 디지털 거주자 확보 사례 ····· 14

04. 딜로이트 제언 ····· 15

4.1. 고수요 신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 ····· 15
4.2. 첨단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미래도시 모델 개발 ····· 15
4.3.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 16
4.4. 디지털 및 첨단기술 활용한 생활·행정 플랫폼 구축 ····· 16

리더 메시지

한동현 파트너

정부 및 공공 서비스 CoE 리더 | 경영자문 부문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경제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 인프라 유지 비용 증가, 사회적 비용의 누적 등 복합적인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생활환경, 일자리, 의료·교육 접근성의 격차는 이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실증 데이터와 지역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망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대응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고수요 산업 유치, 원격근무 인재 확보, 지역 의료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산업·생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합니다.

딜로이트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실현 가능한 모델의 제시, 그리고 실행을 뒷받침하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 인구 유출과 지역 생산성 하락의 악순환

지방 소멸: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 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사실상 소멸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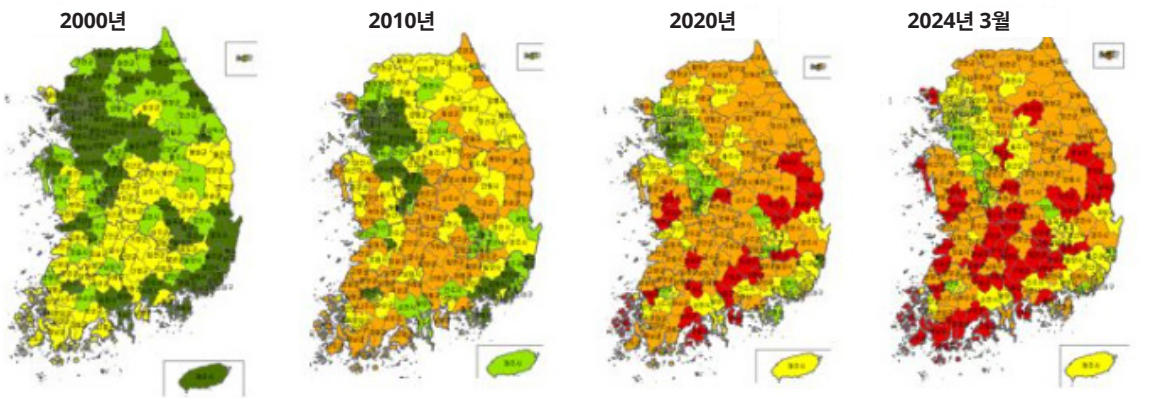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대도시로 인구가 대량 유출되면서 발생
-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생활 인프라, 공동체 붕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소멸위험지역 증가 추세: 20년째 지속되어온 지방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 대한민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2000년 0곳에서 2020년 105곳(46%), 2025년 5월 133곳(58.6%)로 지속 증가세이며, 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1]
- 2024년 부산광역시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지역 포함.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는 0.490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주요 원인[2]

*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나타내며,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출산 가능한 여성 인구(20~39세)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보다 적을수록 소멸위험이 높다는 뜻

그림 1. 소멸위험 지역 증가 가속화 양상 및 소멸위험지수 설명



구분		소멸위험지수 범위	색상
소멸 저위험		1.5 이상	
정상지역		1.0 ~ 1.5 미만	
소멸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	소멸 위험진입	0.2 ~ 0.5 미만	
	소멸 고위험	0.2 미만	

출처: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1.1 인구의 유출

수도권-지방 인구구조 불균형 가속화: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 12% 면적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구조 불균형' 직면

- 2025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86%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비수도권 인구 수 추월[3]
- 지방 인구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수도권-지방 간 인구 수 격차는 2019년 1,737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급증하여 2024년 877, 825명 기록[4] (최근 5년간 약 500배 격차)
-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자연 인구감소 현상은 정주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가속화[5]

  *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발생. 2024년 기준 인구 자연 감소(출생-사망) 규모는 약 -12만 명. 출생아 수 약 238,300명, 사망자 수는 약 358,400명으로 자연감소 폭 확대

1.2 지역 경제의 쇠퇴 및 사회적 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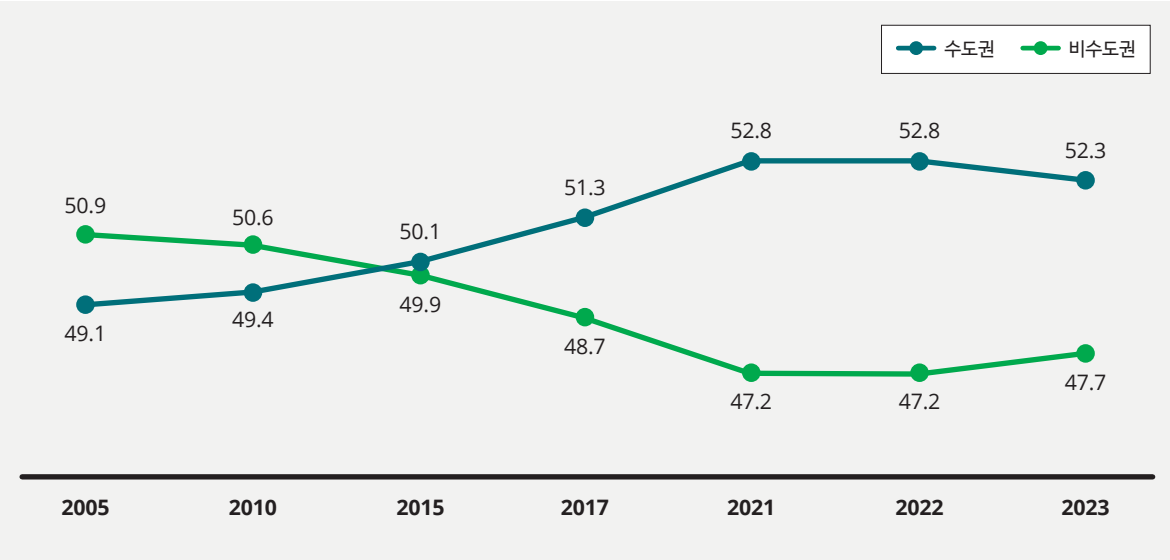
수도권-지방 간 생산성 및 소득 격차 심화: 지방의 생산성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이는 일자리 기반의 약화와 소득수준 저하로 이어져, 결국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초래

-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비중은 2015년 역전된 이후로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수도권 GRDP 비중은 2003년 대비 3.2%p 상승한 반면, 지방은 동일한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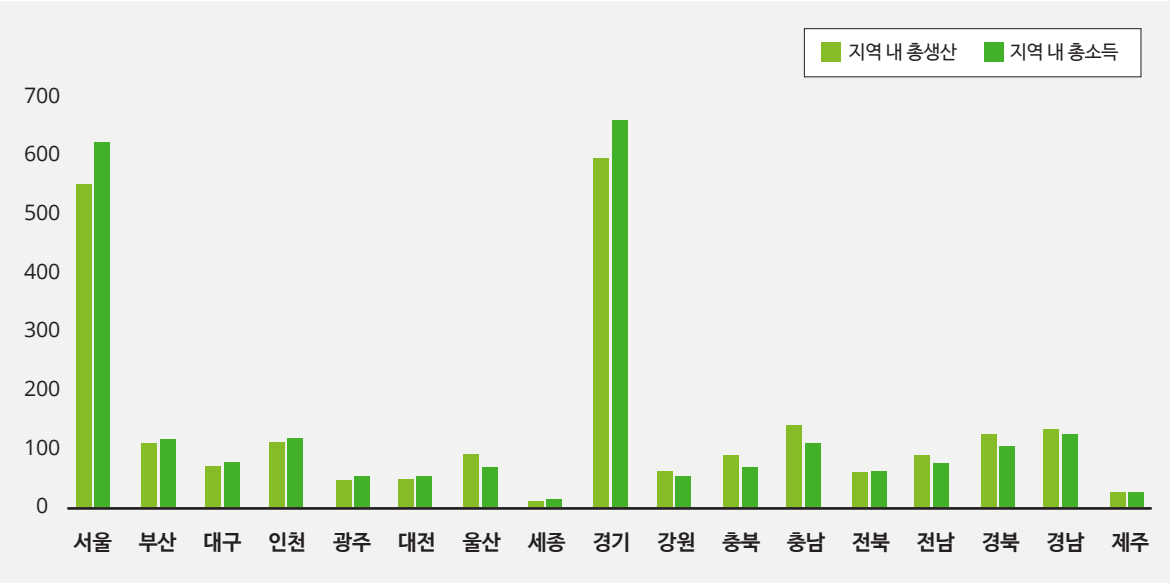
- 지역 총 소득 규모 역시 수도권(서울·경기)과 지방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의 높은 소득 수준과 달리 상당수 지방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경제적 불균형이 한층 심화[6]

그림 2.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변화(%)



출처: 통계청, 딜로이트인사이트

그림 3. 지역총생산 및 총소득 규모(단위: 조원)



출처: 통계청, 딜로이트인사이트

지방소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인구유출과 감소를 겪는 지역의 일자리 및 정주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며, 악순환의 반복으로 국가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 하락과 형평성 문제 발생

- 지방 재정자립도 악화 및 중앙정부 부담: 세수기여도 높은 청장년 인구가 줄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중앙정부에서 세제지원 및 투자를 지속하게 되면서 불공정 발생 가능
    - * 최근 30년(1995~2025년)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 시도하였으나, 성과와 실질적 인구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7]
    - * 현재 정부는 연간 1조원 (10년간 투입 예정)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 중
- 인프라 유지의 비효율: 지방 인구 감소로 인프라 활용률은 낮아지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지속되는 비효율 구조 심화
- 수도권 과밀에 따른 악영향(교통정체 등), 지역공동체 해체와 생활서비스 축소/방치, 지역 문화유산과 공동체 상실 등

02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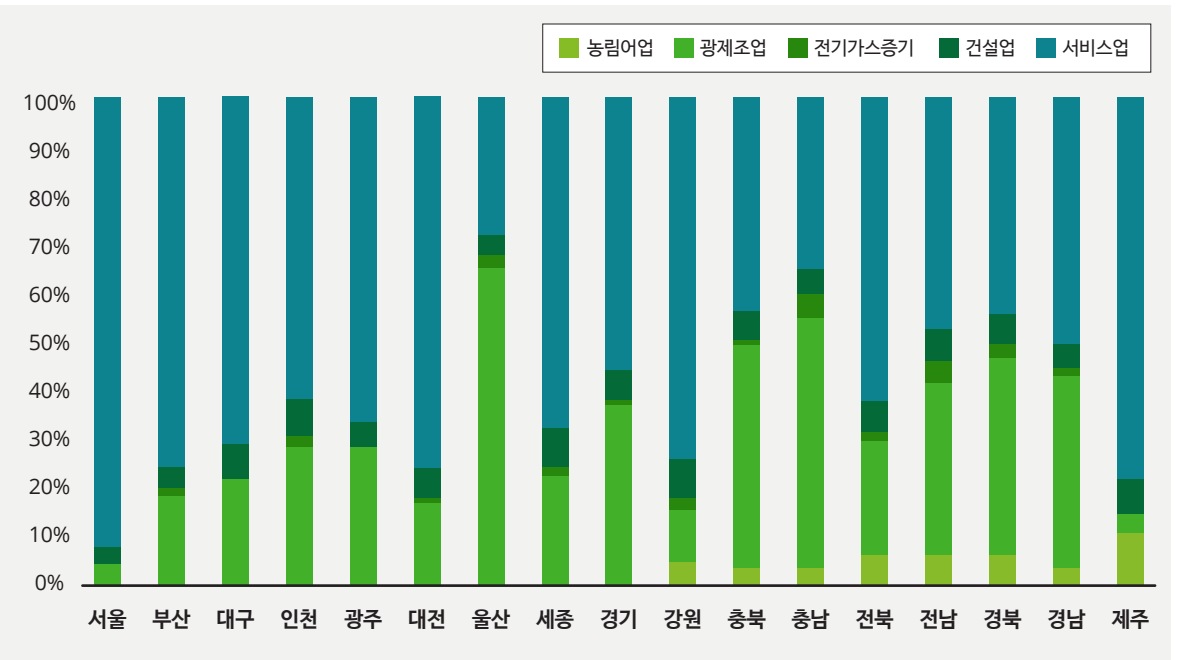
딜로이트는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 시설 부족 등 정주 여건 악화를 꼽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도출에 주력

2.1. 일자리 기반 약화

산업 구조 변화 영향: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업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밀집하고, 지방은 첨단기술 및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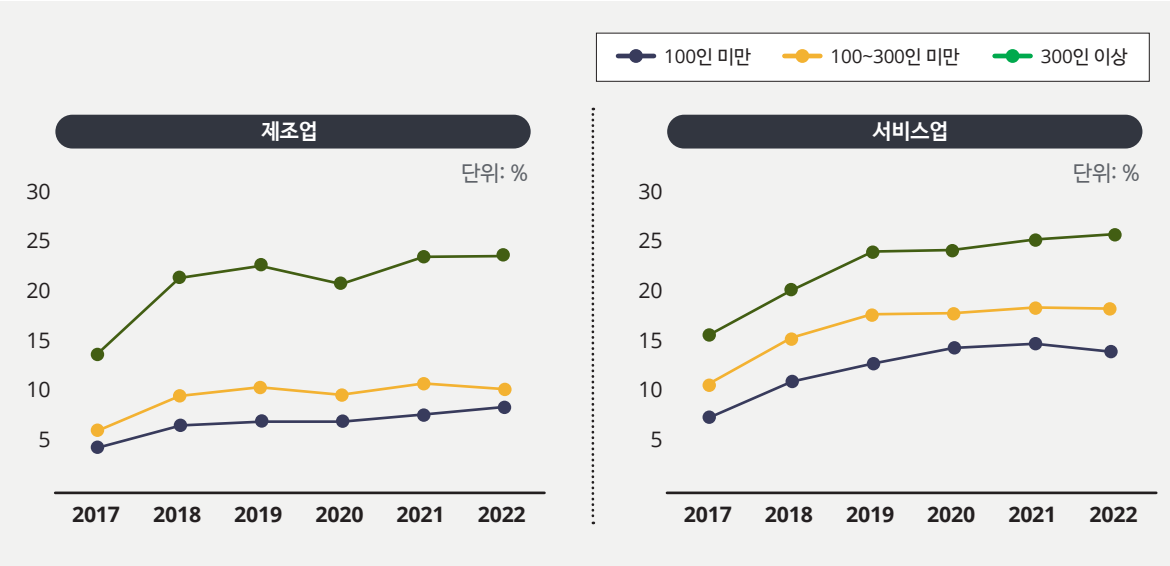
- 100대 기업 본사 중 56개가 서울에, 19개는 경기도에, 4개는 인천에 위치하는 반면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에는 전무[8]
- 첨단제조업은 수도권에 포진해있는 반면 지방은 전통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 성장동력이 둔화되며 지방의 성장성 및 경쟁력 약화[9]
    - 경기도(용인·평택·파주 등) 및 서울 수도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고급 반도체 팹(fab) 및 R&D 기지가 밀집
    - 충청권 및 호남권, 경남 일부 지역은 조립형·가공형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다수
- 제조업일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디지털 기술 활용에서도 뒤처지는 경향

그림 4. 지역별 경제구조(2023 기준)



출처: 통계청, 딜로이트인사이트

그림 5. 기업 유형별/규모별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중 추이



출처: 산업연구원, 통계청

낮은 제조업 성장성: 중국의 저가 출혈경쟁, 미국 관세정책 여파에 따른 대기업 공장 해외이전, 친환경 정책기조 등은 모두 지방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 여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올해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포스코, LS그룹 등 대기업들은 대미 투자 중심의 해외 생산을 기 추진 또는 검토 중
-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렬 시 국내 제조업은 추가적인 수출 감소, 기업 투자 둔화, 고용 불안정 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경기에도 악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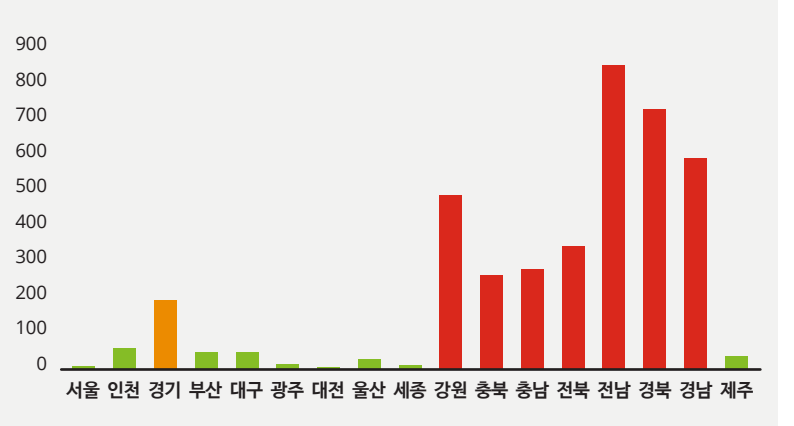
지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층이 순유출되고, 양질의 인력이 부족해 산업, 일자리 기반 및 소비 시장까지 붕괴되는 악순환 지속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 신도시 전체 취업자는 약 150만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전체 증분인 331만명의 약 50%에 해당[10]
- 2024년 기준 소멸위험지수 값 0.4 미만인 지역의 전문직 비중은 15.4%에 그친 반면, 저숙련직 종사자 비중은 41.9% 상당[11]
- 첨단기술 기업과 인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2.2. 수도권 대비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 악화

교육·생활 인프라 축소: 지방은 인구 감소로 교육 시설, 금융 점포 등이 폐업하는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부족

그림 6. 2025년 5월 시도별 폐교보유 현황(단위: 교)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딜로이트인사이트

그림 7. 국내은행 점포 분포지도

출처: 산업연구원, 통계청

의료시설 미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시설 확충이 필수임에도 불구, 의료 서비스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

- 서울에서는 95%, 수도권에서는 90% 이상이 1시간 이내 응급실 도달이 가능하나, 충남·전남 등 일부 지역은 절반 정도만이, 강원 일부 지역은 40%의 환자만이 1시간 내 응급실 이용 가능[12]

  *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에 14곳, 경기 6곳, 인천 3곳에 존재하는 반면 경북과 세종에는 전무

03 글로벌 사례로 본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

지방소멸은 세계적인 현상: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고령화 급진전에 따라 일본, 미주 및 유럽 일부 지역 등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및 지방소멸 현상 발생

-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 저출산, 청년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경험하며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
- 미국과 유럽은 농촌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사회 기반 붕괴와 생활서비스 축소를 경험
- 해당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협력과 대대적인 기업 투자 등으로 소멸위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의 성과 달성

3.1. 산업 기반 전환 및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사례

지방경제는 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 신산업 육성을 추진 및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가능

노스캐롤라이나 리치몬드카운티의 AI 데이터센터 유치 사례: 아마존 데이터센터 유치로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13]

- 농림업을 주력으로 하던 리치몬드카운티는 2000년대 이후 젊은 층 유출이 두드러지며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나 생성형 AI 발전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발맞춰 아마존의 투자 유치
- 아마존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을 목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 투자 예정
- 이로 인해 500개의 고급 기술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AWS(아마존웹서비스) 데이터센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천 개의 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일본 도요타 우븐시티 건설 사례-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지역 개발: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 Corp.)가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테스트베드로 후지산 기슭을 개발한 사례로, 2,000명 이상의 대거 이주가 계획되면서 민간주도형 지방소멸 해결 방안으로 주목[14]

- 도시는 약 7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되며,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스마트홈 등 첨단 기술 테스트 계획
- 2026년부터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테스트를 위해 도요타 그룹 계열사, 기타 기업, 스타트업, 엔지니어, 대학 및 연구기관도 우븐시티에 초대될 것으로 계획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그림 8. 도요타 우븐시티 조감도

출처: 도요타 공식 홈페이지

3.2.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의 결합 사례

소멸위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이슈를 결합하여 해결하는 전략

EU,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 활성화: 유럽 국가들은 영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토지를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여 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 유도[15]

- EU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으로 연 12,500테라와트시에 육박하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전망 (EU가 2023년에 소비한 전력량의 5배 규모)
- 환경 우려, 토지 갈등 등의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수익 공유 모델 등으로 주민 수용성과 지역 공동체 결속 유도
- 한국 정부도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햇빛배당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재생에너지 투자모델 도입 및 지속가능한 수익원 창출 방안 모색 중[16]

3.3. 원격근무자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사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일부 지역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 후 정주 인센티브와 정착 기반을 제공하여 고소득 원격근무자를 유입, 지방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 활력을 도모

일본 가미야마정 - IT기업 위성오피스 허브로 변모한 산간마을: 가미야마정은 일본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의 성공모델. 인프라 투자 및 위성오피스 유치로 소멸 위험 지방에 인구 유입 및 주변 경제 활성화 효과

- 일본 중앙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디지털 기반 지역활성화 모색[17]
-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은 인구 5천명의 산간마을이었으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 후 도심 기업의 위성오피스를 유치
- 가미야마는 12개 정보통신기업이 전통가옥을 개조한 위성오피스를 운영하는 IT허브로 운영되었고, 도쿄 등지 기업의 직원들이 가미야마에서 근무하며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 상회[18]

그림 9. 가미야마정 전경 및 위성오피스 입구

출처: SMOUT 이주연구소, ゼクウな日々編集部

미국 털사 Remote 프로그램 추진 사례: 원격 근무자 유치가 지역 경제 발전에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19]

- 오클라호마주 털사(Tulsa)의 지역 비영리재단은 원격근무자 유치 프로그램을 실행,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재가 털사로 이주 시 1만 달러의 지원금과 정착 서비스 제공
- 2018-2023년 동안 2,800명 이상의 고소득 청년 인재들이 각지에서 털사로 이주
- 이들의 소득인 총 5억 6,360만 달러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 기여 및 지역 시장 활성화

3.4. 의료시스템 확충 이후의 정주여건 개선 사례

의료시설 부족은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국은 의료시스템 확충 및 정비를 핵심 과제로 추진

캐나다 주정부의 의사 유입 전략: 캐나다 주정부는 소멸위험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 인력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 추진

- 주정부는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진료소를 설립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역별 채용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보건당국 차원의 의료인력 모집 정책을 수립
- 뉴브런즈윅 주정부는 딜로이트와의 협업으로 지방 의료인력 운영에 대한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와의 타겟 인터뷰 실시, 뉴브런즈윅 환경에서 채택하기 적합한 모범사례 확인 및 도입 지원[20]
- 1만명 규모의 의료시설이 개원되는 등 성과 달성[21]

일본 고토시와 이나시의 원격의료 기술 활용: 일본 정부의 원격의료 전면 허용 후 이나시 등 7개 지자체가 '이동식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드론 의약품 배송 도입[22]

- 고토열도 내에 드론배송 전문기업 소라이이나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격의료 차량 도입 등의 비용은 중앙정부의 '지역 의료체계 강화 지원금' 등에서 보조
- 원격의료 허용 후 일본 내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원격의료 보급률이 높아지는 경향
- 이동식 원격의료가 지방소멸 극복에도 기여했다는 평가[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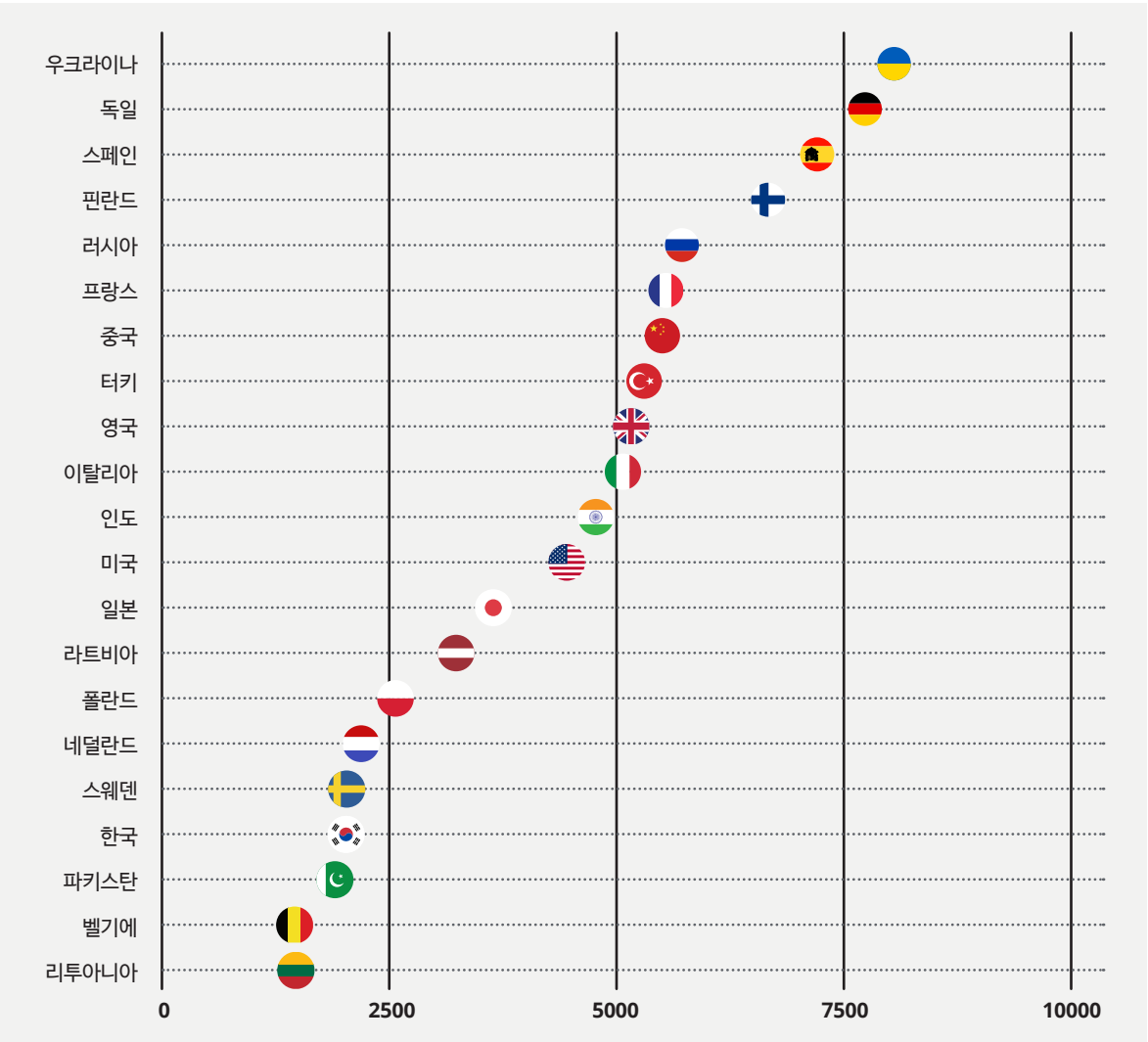
3.5. 디지털 거주자 확보 사례

전자 시민권(e-residency) 등 제도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홍보하는 전략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 제도: 에스토니아는 2014년에 전자영주권(e-Residency) 제도를 도입, 외국인에게도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여권을 지급하고 회사 설립 등을 허용[24]

- 2025년 기준 전세계 180여개국 12만 5천명 이상이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을 보유하고, 3만 6천개 이상의 기업을 설립하여 글로벌 사업 운영
-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거주자 및 기업을 확보하여 세수 증대
-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실제 이주 및 투자로 연결

그림 10.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발급 상위 국가



출처: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웹페이지

04 딜로이트 제언

4.1. 고수요 신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수요가 확대될 미래 유망 산업(예: 우주, 데이터센터, 바이오, 이차전지 등)으로 주력 산업의 전환을 유도(예: 노스캐롤라이나 AI 데이터센터 유치)

- 지역 맞춤형 산업 진단 및 전략 수립
  - 각 지역이 가진 산업 구조, 인프라, 인재, 자원 등의 특성을 분석해 유치 가능한 미래 유망 산업 선별
  - 해당 산업으로의 전환 경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로드맵 개발
- 신산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 지원
  -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데이터센터, 바이오 연구시설, 우주산업 인프라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 기획
-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 산업으로 재편
  - 기존 중소·중견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및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지역 내 산학연 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촉진

4.2. 첨단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미래도시 모델 개발

첨단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거점형 미래도시 모델 유치 필요 (예: 도요타 우븐시티)

- 지역내 산학연-기업-지자체 간 연계 체계 설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인센티브 정책 설계, 투자 유치 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 설계, 협의 프로세스 구축, 투자 성과 관리 방안 지원
  -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세정책 및 규제 개선 및 정책 협의 지원

4.3.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고령층이 많은 지방 내 병원·헬스케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인력·시설 투자 확대 필요(예: 캐나다 일부 지역)

- 지역별 보건의료 인프라 진단 및 개선 로드맵 제공
  - 지방별 인구구조, 질병현황, 의료시설·인력 분포 등 의료환경 정밀 분석
  - 의료기관 입지 선정, 인력재배치, 투자 우선순위 등 최적화된 의료 인프라 확충 전략 설계

스마트 헬스케어 및 신기술 도입 방안 마련

- 지리적 한계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긴급 의약품·장비 배달체계, 원격진료, 모바일 검진차량 등 첨단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
  - 드론·원격진료·모바일 헬스솔루션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도입 기획, 실행 지원, 규제 개선안 수립
-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한 AI, IoT 활용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및 응급연계 시스템 도입 등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글로벌 선진 사례(예: 캐나다 원격진료, 핀란드 드론 의약품 배달 등)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스템 설계 지원

4.4. 디지털 및 첨단기술 활용한 생활·행정 플랫폼 구축

AI·자율주행·로봇 등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으로 인프라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 향상, 소멸위기 지역의 생활인프라 격차 이슈 해소

-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시티·생활플랫폼 비전,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첨단기술(자율주행, AI, IoT, 로봇 등) 도입예산, 효과분석, 위험관리 방안 제시
  - 글로벌 선도사례 벤치마킹(예: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및 지역 적용 방안 설계
  - 국내외 혁신 ICT·로봇 기업과 연계, 최적 솔루션 선정 및 도입 지원
- 디지털 행정·생활서비스 개발 및 실행지원
  - 프로세스 자동화, 주민 중심 UX/UI 설계, 민원·행정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컨설팅
  - 보안·개인정보 이슈 컨설팅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방안 제공
- 디지털 거주자 유치 정책·프로그램 기획
  - e-Residency, 원격근무자 인센티브, 생활·정주 인프라 설계 등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마련(예: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제도)
  - 법·제도 개선 컨설팅, 디지털신분증·원격민원 인증 등 실질적 실행모델 제공

주석

1.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한국고용정보원, 2024.06
2. ibid
3.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5.01
4. 수도권 및 비수도권 주민등록 인구 추이, 행정안전부, 2025.01
5.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통계청, 2025.02.26
6. (보도자료)2023년 지역소득, 통계청, 2024.12.20
7.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 38권 제3호, 2024.09;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행정안전부, 2024.7.25
8.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시사점, 하나금융연구소, 2025.05
9.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2023.11
10.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24.05
11. 지방소멸 2024 :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한국고용정보원, 2024.06
12.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 국립중앙의료원, 2023.09
13. Amazon plans to invest $10 billion in North Carolina to expand cloud computing infrastructure and advance AI innovation, Amazon Official Webpage, 2025.06.04
14. Toyota Woven City Official Webpage
15. Renewable energy: Rural areas can be the EU's green powerhouse, The Conversation, 2025.2.26
16. "태양광 설치하고 배당받는다"...인구 소멸지역에 '희소식', 한국경제, 2025.7.18
17. '지방창생'에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로: 일본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2023개정판)의 주요 내용과 국내 스마트 농촌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농촌연구원, 2024.06
18. Digitisation and new tech to help regenerate rural areas in Japan, Euronews, 2022.02.22
19. The Effects of Tulsa Remote on Inducing Moves to Tulsa:Estimates and Implications, Timothy J. Bartik,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2025.05.20
20. Support for Rural Recruitment Strategy, Deloitte Quals
21. Doctor on the brink of reinventing family practice for 10,000 rural N.B. residents, CBC, 2025.03
22. 일본, 이동식 원격의료로 '의료 난민' 줄인다, 연중기획, KDI, 2023.09
23. ibid
24. e-Residency in numbers, REPUBLIC OF ESTONIA E-RESIDENCY, 2025.07.27 접속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 및 공기업 부문 전문가들은 정책 제도 수립, 산업 활성화 파급효과 분석,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동현 파트너
정부 및 공공 서비스 CoE 리더 |
경영자문 부문

02 6676 3015
donghyuhan@deloitte.com

김정열 파트너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02 6099 4490
jeongykim@deloitte.com

심인섭 이사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02 6099 4710
inssim@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